

(통권 21-12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7. 15.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I. 경제	1.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1
II. 재정	2.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이슈 점검	3
	3. 주택시장에서 '증여'증가 현상과 정책적 시사점	5
III. 정책	4. 코로나19이후 대도시 집중·분산 이슈탐색	7
	5. 인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	9
	6.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11
	7.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숲 체계'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취약지역 우선순위 선정	14
IV. 법률 제·개정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15

1.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상존하는 경기 불확실성 및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상·하방 요인 등 2021년 하반기 경제 (해외) 이슈를 선정

- 첫째 , 향후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 국가·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욱 확대 예상
- 둘째 ,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 , 장기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
- 셋째 ,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
- 넷째 , 최근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장기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다섯째 ,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에서 혁신이 발생 ,사람들의 기술 적응도도 더욱 빨리질 것으로 예상

○ 국내 이슈

- 첫째 , 최근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 소득별 ,연령별 ,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
- 둘째 ,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급증하면서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셋째 ,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ESG 경영확산
- 넷째 , 남북경협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레 제

기되는 가운데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주의, 국제사회의 지지, 국민적 공감대, 경험 제도화, 민간 주체들의 적극성 필요

<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		
이슈 제목		선정 배경
해 외	①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 향후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 방역환경 차이 등에 따라 국가·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욱 확대
	② 신냉전 시대의 도래	-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 장기화됨에 따라 마·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
	③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
	④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 최근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장기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
	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기술 적응도도 더욱 빨라지는 모습
국 내	①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 최근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별, 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
	②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급증하면서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③ 막 올린 ESG 경영	-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ESG 경영 확산이 가속화
	④ RENEW 남북경협	- 남북경협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국제사회의 지지, 국민적 공감대, 경험 제도화, 민간 주체들의 적극성이 필요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21. 5)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2.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이슈 점검

- 현실화율 제고에 의한 공시가격 상승이 전체 공시가격 변동의 10~2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공동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시장 요인의 결과
- 올해 주택공시가격 상승 폭이 예년보다 훨씬 커짐에 따라 공시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주장 제기
 - 주택공시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공시가격 상한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 공시가격 상한제는 부동산공시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함
 -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힘
- 국민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공시가격보다는 세율, 세액 공제, 세부담상한선 등 조세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국민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함
- 2020년 11월 3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함
 - 공동주택은 2020년 69.0%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임
 - 단독주택은 2020년 53.6%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높임
- 정부는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여 목표 현실화율로 90%로 설정함

-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종 목표 수준, 연차별 목표는 국민 부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와 더불어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밝히는 등 투명성 요구도 커지고 있음

-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인 시세 자료(실거래가 등)는 공시대상 주택 수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므로 공시대상이 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개별주택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도 여의치 않으므로 공시가격 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도 어렵고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서 납세자의 불만이 줄어들지 확신하기 힘들

○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토지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결정 권한은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형태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앙이 전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함

○ 지방분권 강화와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결정권에 있어서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모색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TAX ISSUE PAPER 37호, 2021. 5.)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3. 주택시장에서 '증여' 증가 현상과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와 함께 주택 증여 증가
 - 세대간 부의 이전은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 과거에는 재산을 상속으로 이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 최근 '증여'를 통해서 세대간 부의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청년층 및 사회 초년생의 '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
- 부의 조기 이전에 따라 증여세 등 납부 능력이 부족한 수증자를 위해서 증여자가 증여세 등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발생
 -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고 대신 대출을 상환하거나, 거래를 증여로 위장하는 사례, 불공정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를 대물림한 '변칙 증여' 등이 발생
- 2021년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102,109건으로 전월('21.2월, 87,021건) 대비 17.3% 증가, 전년 동월('20.3월, 108,677건) 대비 6.0% 감소, 5년 평균(81,598건) 대비 25.1% 증가함
 - 서울만 전월 대비 12.5%가 감소하였고, 충남(71.9%) > 광주(48.7%) > 전남(39.3%) > 전북(35.8%) 순으로 전월 대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20년은 전년대비 매매거래량이 28.8% 증가하였고, 증여거래량은 37.5% 증가, 증여거래가 매매거래 보다 더 많이 증가함
 - 매매거래는 2012년부터 거래량이 증가하여 2020년 총 주택매매거래량은 2,021,865건으로 최저 매매거래량을 보인 2012년 대비 201% 증가하였음

- 증여거래는 2010년부터 증여량이 증가하여 2020년 총 주택증여 거래량은 152,427건으로 최저 매매거래량을 보인 2010년 대비 284% 증가하였음
- 2006년 이후 월평균 증여거래는 월평균 매매거래의 8% 수준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격차는 2014년 3.5배에서 2020년 3.1배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3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
- 지방자치단체 세입 분권 수준은 2014년도 22.4%에서 2020년도 24.3%로 6년 동안 1.9%p 확대되었음
-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로 2021년부터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는 3%가 적용되고, 3주택이상(조정 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법인·개인 모두 2배 정도 세부담이 증가
-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전세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하였음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향후 다주택 납세자는 매매보다 증여를 지속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증여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소유 주택 수가 아닌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주택과 비거주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체계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TAX ISSUE PAPER 39호, 2021. 5.)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4. 코로나19 이후 대도시 집중·분산 이슈탐색

- 정보기술은 그동안 물리적 공간 보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상 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대체하며 체감적 이해도가 향상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이동제약 조치와 대규모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 및 원격 교육 등 비대면 활동을 경험함
 -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장소에 대한 재성찰에 영향을 줄 것 예상
- 비대면 사회현상의 증가는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도시의 고용충격과 대도시 내 사회적 양극화 발생 우려
 -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의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의 상품권별 거래액증가는 코로나19 이후 현상 반영
 - 비대면 소비로 대도시 내 자영업 폐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빈 점포 및 상가 증가는 순차적으로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대비 2020년 대도시 일평균 인구이동량 및 상업·사무지역 등의 일평균 인구이동량이 감소하였음
 - 일상생활의 이동량변화는 장기적으로 도시 공간구조 영향
 -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증가에 따라 소비와 상업의 형태, 교통수단, 직업, 계층 간 소득 등에 미치는 사회현상의 변화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정보기술과 국토공간 그리고 일상생활 간의 관계는 변화 예상되며, 대도시는 변화의 중심 예상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대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집중과 분산을 중심으로 관련이슈를 탐색함
 - ‘코로나19 발생은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밀도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출발하여 대도시의 분산과 집중, 그리고

공간적 불평등 등과 관련된 이슈로 세분화되었음

- ‘분산’과 관련해서는 ‘대도시 축소’와 ‘중산계층 이탈’ 등의 이슈가 탐색되었고, ‘집중’과 관련해서는 ‘현재기조 유지’, ‘공간적 불평등’ 등의 이슈가 탐색됨
- ‘분산’과 ‘집중’이라는 대립적 이슈로만 생각되었던 대도시 문제에 대해 세부 내용별로 다른 맥락에서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사회변화가 가져올 환경에 대비해 대도시 정책방향 검토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기존의 관행과 기대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코로나19가 대면접촉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온라인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택근무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대도시의 분산과 분산형 공간구조로의 재편 등 거대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기 어려움
- 인구 70%가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접지역 및 중소도시 등 전 국토의 변화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화를 고찰해 나가야 함
 - ‘위기는 곧 기회’라는 역발상의 개념이 다시금 필요한 시기임에 따라 위기에 대해 대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전 국토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출처 : 국토연구원(위킹페이퍼, 2021. 5)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5. 인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회원 국 중에서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고, 2019년은 0.92명, 2020년은 0.84명으로 더 낮아져, 우리나라의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통,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인구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제안
- 인구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영역에 포함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인구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함
 - 인구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의사결정과정, 지역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의 상황에 맞는 학교급별 인구교육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야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문제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인구교육을 실천하여야함
 - 인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구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연구 지속 필요
- 시·도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가 중심이되어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실행가능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인구감소는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주체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교육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와 협력 중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의사결정 가능한 거버넌스(민관협치) 구축 필수
- 학교에서 인구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하며,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원전문성 함양, 인구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 인구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 수준에 따른 기초, 기본, 심화의 연수과정개발, 인구교육을 연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을 지원
- 교사가 학교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에 적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포럼, 2021. 4.)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6.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 코로나19가 지역별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후 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의 고용 지위이동률이 높았으며,
 - 특히 서울시 임시일용직의 실업자나 비경활인구로의 전환이 두드러졌으며,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비경활로의 전환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1차 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취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경험률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실직 경험률이 특히 높게 나타남
 -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경험률이 높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축근로와 유급휴직의 비중이 높았음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주민의 근로·사업 소득 역시 감소
 - 지역 간 소득 감소의 폭은 14~17%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2020년 4월에 비해 9월에 근로·사업 소득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약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
 - 가구 총소득과 빈곤율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 반면, 서울시는 박탈 경험률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 경기도는 대출신청 경험(7.6%), 충청남도는 신용카드 연체(4.1%), 경상남도는 적금, 보험 해지(5.1%) 경험이 각각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미친 충격은 어느 지역이나 예외가 없었음. 하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충격의 양상과 추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음.
- 이는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상황 등이 다른 데서 기인함. 이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정책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

○ 정책적 시사점

-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과 지자체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한국적 긴급재난지원 모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재난지원 관련 정책은 단기적 관점에서 소득보호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을 개선
-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면 코로나19가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 코로나19 감염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 백신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
- 재난 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확충, 지역사회 고통 분담 협약 등으로 일부 취약계층의 일방적인 희생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구상할 필요
- 가입자의 납부 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확대
- 가구 단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 및 기간 제한)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체계적 검토
- 지자체 나름의 재난지원 대응 모델 개발 필요. 또한 관련 피해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링 작업도 필요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재난이 닥칠 경우 사회연대기금 조성, 한시적 소득공제 환급금 축소 혹은 폐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1.7)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7.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숲 체계'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취약지역 우선순위 선정

- 충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축사와 발전소 배출 미세먼지와 편서풍에 실려 오는 미세먼지 차단이 우선 필요하므로 외부유입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고, 내륙발생 미세먼지를 이중 저감 할 수 있는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숲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숲 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충남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축사, 발전소, 해염입자를 선정하였음
- 이로부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충남의 자연자원 및 국가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서해안의 해안림(1차 차단막), 읍면단위의 마을숲(2차 차단막), 동단위의 도시숲(3차 차단막)을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숲 체계'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였음
-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숲 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축사와 발전소, 해염입자로 인한 미세먼지 노출정도와 이에 대한 취약정도를 분석하고 이들의 합산평가를 통해 미세먼지 취약지역의 우선순위를 최종 3단계로 제시하였음
- 향후 충남은 이렇게 도출된 미세먼지취약지역 우선순위(1~3순위)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지역 이외 읍면지역에서의 마을숲 조성에도 심열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출처 : 충남연구원(2021.6)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 표준액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 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

출처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1.05.24. ~ 2021.06.02.)

원문은 e-mail에 첨부함